

미세먼지에 손잡은 與野, '재난성격' 놓고는 이견

대기환경보전법 등 국회 계류중 시급성에 공감... 대책입법 나서 '자연재난·사회재난' 의견 엇갈려

여야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자고 단결한 가운데, 어떤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인다.

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에 뜻을 모았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6일 여야는 사태 시급성에 공감하며 미세먼지 대책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따라 이어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경보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미세먼지 등 배출

량 정보 수집·분석은 환경부령에 국한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

되면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한국당에선 조경태 의원이 정부의 대기환경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계획 시행 주기를 줄여 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격상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회재난'으로 보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제와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

기 때문에 자연재난이란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노동부는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세먼지 5법'을 내놓으며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쪽에 무게가 쏠렸다. 민주당이 추진한 5개 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으로 대부분 기업 규제 강화책이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규정부터 예방, 안전관리 규정까지 100여건이 넘는다. 4년째 국회를 떠도는 법안도 다수라 여야가 미세먼지를 어떤 재난으로 규정하고,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靑으로 헤쳐모인 외교전문가들, 왜?

국가안보실 초고속 개편

대미 담당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가운데,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일부터 28일까지)에 따른 것이라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난 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에서전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군인이자, 김 제2차장은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하고 UN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협상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실 산하에 대미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이를 방증한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제1차장실 산하)'이 임명됐다. 이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조정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중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설로 인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된 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제2차장실 산하 2개 비서관' 체제가 각각 3개 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폐지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의 업무인 '군비 축소'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기획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7일 국제무대에서 외교·예절 등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를 임명했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시

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점을 예사롭지 않게 봤다. 실제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즉, 문 대통령이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후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김 제2차장 등은) 그 책임자"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직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사진)를 임명했다고 7일 청와대가 알렸다.

박 신임 비서관은 1964년생으로 광주 출신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외교부에서 중남미국장 및 유엔과장 등을 역임한 관료(외무고시 23회)다.

한편 박 신임 비서관 전임자인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 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전비서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은 약 3개월만에 이뤄진 인사다. /우승준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할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출퇴근시간 카풀운영 전격 합의

택시업계·카카오모빌리티 "공유경제 상생발전 도모할 것"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출·퇴근시간 카풀 운영과 택시노동자 월급제 등 6개 사안에 대해 7일 합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6개 사안은 ▲플랫폼 기술의 택시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택시업계 승차거부 근절 및 교통편의 향상 등이다.

이들은 먼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

했다.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풀의 경우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했다.

택시업계는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를 감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교통편의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정과 업계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 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대성 기자

서울고등법원 보석허가율 35.8%

8년새 17% ↑ ... 전국 허가율 28.8%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건부 석방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바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구속만 기일인 4월 8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피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두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각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당일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바주기 석방을 해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통계상 보석 허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전직 대통령처럼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은 아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0년 43.9%(3767건 허가/8582건 처리)였던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지난해 33.3%(1864건/5590건)로 푹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 허가율은 44.5%(3649/8196)에서 34%(1768/5195)로 줄었다. 전국 고법의 보석 허가율 역시 3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함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3/337)에서 28.8%(95/329)로 내려갔다.

반면, 서울고법 보석 허가율은 19.12%(35/183)에서 35.8%(95/329·춘천지원 제외)로 뛰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3월 허가율은 42.9%(9/21)였다. /이범종 기자 joker@